

농림부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 발표

농림부는 지난 2월 27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다.

농림부가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범위에 방역관리가 필요한 '고양이' '타조'를 추가하고 방역관리 필요성이 약한 '메추리' '꿩'을 각각 삭제했다. 또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질병에 소해면상뇌증(광우병)과 사슴만성소모성질병을 추가됐다.

또한 이동제한명령등을 위반한 농가의 가축을 운송 또는 도축해 준 영업자에게 위반회수에 따라 최소 15일부터 최고 6개월까지 운행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을 정했다.

가축 사체의 열처리 등 재활용 대상가축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한 농장에서 살처분된 가축을 추가하고 재활용의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 신고·이동제한·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정도에 따라 평가금액의 40%부터 100%까지 차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축산물 등 폐기되는 오염물건중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것은 현행대로 평가금액의 40%를, 인근농장·도축장·판매업소 등의 것은 평가금액의 전액을 지급토록 했다.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에서 살처분명령 미이행 농가, 비농업인, 축산업 미등록 농가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를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와의 비용 부담비율을 50%로 하되, 농가의 소독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게는 이를 차감 지원토록 했다. 생계비용은 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을 상한

액으로 해 구체적 기준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수립,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하고, 농가 또는 마을 단위 질병관리등급의 관리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농협, 방역본부 등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했다.

● 2003년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발표

농림부는 지난 2월 27일 2003년도 구제역,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및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근절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농장채혈, 양축농가 교육홍보 및 방역규정 위반 신고포상금 사업 등을 포괄하는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구제역·돼지콜레라·광우병 발생시 신고의무를 기피하거나 방역관리를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가축질병의 현장 방역이 크게 보완된다. 또한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병 근절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농장채혈, 양축농가 교육홍보 및 방역규정 위반 신고포상금 사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올해 질병별 농장 채혈물량은 구제역 2,024호 농가에 1만100마리, 돼지콜레라 1만3,000호 19만6,400마리, 돼지오제스키병 9,800호 30만 마리, 닭뉴캐슬병 2,300호 10만마리 등이다.

또 방역관리위반 신고포상금도 1,000만원으로 배정됐으며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구제역 발생의 경우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정되면 100만원, 임상소견이 의심돼 정밀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5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또 돼지콜레라 발생 50만원, 광우병 발생 100만원, 이동제한 명령 위반행위 20만원, 돼

지콜레라 예방접종시 30만원, 도축장·농가의 소독 미 실시 20만원, 닭뉴캐슬병 예방 접종 미 실시 20만원 등이다.

● 육계·산란계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협의회

농림부 김달중 축산국장은 지난 2월 28일 본회와 양계협회 등 종계 및 계열화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산업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달중 국장은 최근 육계불황 및 불투명한 전망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종계업체와 계열화업체 양측 협의 하에 종계감축 방안을 마련,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육용종계 과잉 사육수수 도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고, 감축비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본회와 양계협회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양계수급안정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감축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키로 했다.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시·군 방역단을 38개 출장소로 조직개편

(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상임본부장 정영채)는 현재 1백28개 조직으로 운영하던 시·군방역단을 3~4개 시군을 묶어 모두 38개 출장소 체제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방역본부의 이같은 방침은 시군방역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긴급방역시 방역요원에 대한 동원 및 투입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 단위로 1백28개 방역조직으로 방역요원이 움직이다 보니

긴급방역을 요할시 신속한 동원이 어려웠으며 방역요원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이 결여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요원에게 소속감과 사명감을 심어주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긴급 방역시 인력동원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설되는 출장소는 3~4개 시군을 가축위생시험소 조직과 동일하게 통합하게 되고, 출장소장은 해당지역 축산관련단체장으로 위촉하게 되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따라서 방역본부 산하에는 8개 도지부 38개 출장소가 운영되고 출장소는 도본부 직할로 운영, 관리되며 방역요원 중에서 적임자로 하여금 방역팀장으로 임명해 운영하게 된다.

방역본부는 또 1백35명에 대한 방역요원을 양계전문 방역요원 33명을 증원한 1백68명으로 증원하게 되며 그동안 전임방역요원에 대해서도 활동비를 인상해 지급키로 했다.

양계수급안정위원회

● 산란노계도태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양계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 회의실에서 가진 산란노계 도태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산란노계도태처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산란노계 150만수를 랜더링 처리키로 하고, 랜더링 공장에 상차 및 운반비(수당 2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육계값 안정을 위해서 육용종계 도태물량, 종계장과 계열업체 도태비율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계열업체와 종계업체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 추후 협의한 후 추진키로 했다. ☺